

상장사·중소기업의 투명회계·적법세금·성공경영 정보 —



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

공인회계사 조세 eAnSe.com

온라인 30분내 Q&A 문서답변과 방송



중기업
경영관리
외주화

2024/ 8/ 7 통권 1687호

CEO·CFO·COO·회계책임자·조세전문가·재경실무자·총무담당자·모든 관리자용 **名品** 주간지

2024년 세법개정안 (요약본·문답자료)

- 상속세·증여세 최고세율 인하
- 과세표준 10억 초과시 40%로 변경
-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
- 밸류업·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·창업 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 확대(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)
- 결혼세액공제 신설
- 혼인신고 하면 100만원 세액공제(부부 1인당 50만원)
-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
-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
- 첫째 15만원 → 25만원
- 둘째 20만원 → 30만원
- 셋째 이후 30만원/인 → 40만원/인
-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
- 수영장,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30% 소득공제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확대
- 납입한도 연 2,000만원 → 4,000만원
- 비과세 한도 200만원 → 500만원
- 국내투자형 ISA 신설하여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
-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
-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 및 증여할 때 20% 할증해 평가하는 '최대주주 할증평가' 제도 폐지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·經營 戰略

〈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위한 중견기업 규모기준 조정(안)〉

	현행	개정안												
	●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	●제외업종 추가, 규모기준 조정												
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	3년	5년 (코스피·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)												
제외업종	소비성서비스업, 금융업, 보험·연 금업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	- 부동산 임대업 추가												
중견기업 규모기준 (3년 평균 매출액)	3,000억원 미만 (R&D 세액공제 적용시 5,000억원 미만)	중소기업 졸업 기준금액의 3배 미 만 (R&D 세액공제 적용시 5배 미만)												
		<table><tr><td>기준금액 (억원)</td><td>업종</td></tr><tr><td>1,500</td><td>의류제조, 1차금속제 조 등</td></tr><tr><td>1,000</td><td>식품제조, 건설, 도 소매 등</td></tr><tr><td>800</td><td>운수창고, 정보통신 등</td></tr><tr><td>600</td><td>보건사회복지, 기타개 인서비스 등</td></tr><tr><td>400</td><td>숙박음식, 교육서비 스 등</td></tr></table>	기준금액 (억원)	업종	1,500	의류제조, 1차금속제 조 등	1,000	식품제조, 건설, 도 소매 등	800	운수창고, 정보통신 등	600	보건사회복지, 기타개 인서비스 등	400	숙박음식, 교육서비 스 등
		기준금액 (억원)	업종											
		1,500	의류제조, 1차금속제 조 등											
		1,000	식품제조, 건설, 도 소매 등											
		800	운수창고, 정보통신 등											
		600	보건사회복지, 기타개 인서비스 등											
400	숙박음식, 교육서비 스 등													

(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작성)

안세회계법인
02-829-7557

회계·경리·세무·재무·인사·노무·총무·법무·기획·재경(AnSe consulting)
경영관리·총무 outsourcing + secretarial 서비스 + 중소기업창업·보육·지원센터

안전조세정보
02-829-7575

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

통권 1687호 / 주간 32호

2024. 8. 07. (수)

·발행인: 이윤선
·제작: (주)안건조세정보
·대표전화: (02) 829-7575
·FAX: (02) 718-8565

목차

❖ 회원가입 문의 안내

· 서울·수도권·경기·인천
전화: (02) 829-7575
팩스: (02) 718-8565
· 부산·경남
전화: (051) 642-3988
팩스: (051) 642-3989
· 대구·경북
전화: (053) 654-9761
팩스: (053) 627-1630
· 대전·충청
전화: (010) 3409-2427
팩스: (042) 526-1686
· 수원·안산
전화: (010) 5255-6116

❖ 매월 구독·자문료 5만원
온라인 입금계좌
· 우리은행
594-198993-13-001

정회원(주간+월간 등)
월 구독료
5만원

eAnSe.com의 차별화특장

- ① 오늘 30분내 Q&A 전송
-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
-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
- ④ 즉답(010-2672-2250)
-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
-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
-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
- ⑧ CEO·CFO 경영에세이
-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
- ⑩ 세무·회계·재경고문
-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

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
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.

■ 2024년 세법개정안

I.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

- | | |
|-------------|---|
| 1. 그간의 추진경과 | 2 |
| 2. 조세정책 여건 | 3 |

II. 2024년 세법개정 기본방향

5

III. 세법개정 상세 내용

6
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경제의 역동성 지원 | 7 |
| 2. 민생경제 회복 | 17 |
| 3. 조세체계 합리화 | 23 |
| 4.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| 30 |

■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

I. 경제의 역동성 지원
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투자·고용·지역발전 촉진 | 33 |
| 2. 기업경쟁력 제고 | 35 |
| 3. 자본시장 활성화 | 36 |

II. 민생경제 회복

39

-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|
| 1. 결혼·출산·양육 지원 | 39 |
| 2. 서민·중산층 부담 경감 | 40 |
| 3.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 | 40 |

III. 조세체계 합리화

41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세 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| 41 |
| 2. 비과세·감면 정비 | 42 |
| 3. 세원투명성 제고 | 45 |

IV.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

46

- | | |
|--------------|----|
| 1. 납세자 편의 제고 | 46 |
| 2. 납세자 권익 보호 | 47 |
| 3. 세원투명성 제고 | 45 |

V. 기타

48

◇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·재정환율

48

2024년 세법개정안 (요약본, 문답자료)

- 기획재정부, 2024. 7

I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

1 그간의 추진경과

□ ('22년) 투자촉진·민생안정 지원 및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개편

- (투자촉진) 법인세율 인하,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구축 및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* 확대
 - * 중견기업 대상 확대(매출 4→5천억원 미만), 가업상속공제한도 상향(+100억원) 등
- (민생안정) 소득세 과표 조정, 근로·자녀장려금 확대, 식비·주거비·교육비·문화비 등 생계비 경감 등 서민·중산층 지원 확대
 - *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,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0% 확대 및 요건 완화
- (부동산세제 합리화) 담세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되었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합리화*
 - * (종부세) 다주택자 중과 완화, 기본공제 확대,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
 - (양도세) 다주택자 중과 한시 유예,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

□ ('23년) 경제활력·민생안정 지원 지속, 인구 등 구조적 위기 극복 지원

-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*, 서민·중산층·소상공인** 지원 지속
 - * 국가전략기술 지원 확대,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
 - **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,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등
- 인구감소·지역소멸 등 미래대비를 위한 역량 강화 병행
 - * (인구) 혼인·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,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
 - (지역)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·법인세 감면 신설 등

□ (올해) 상반기 중 조기시행 과제 수시 개정·조치 완료

- 소상공인 지원, 물가안정, 경제 활력 제고 등 적기 대응을 위해
‘24년 상반기 중 법령 수시개정 완료
 - 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(연 8천만원 → 1억 4백만원)
 - ② 48개 농·축·수산물 등 할당관세 인하
 - ③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(1.1.~8.31.),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(1.1.~12.31.)
- 「2024년 경제정책방향」(‘24.1.), 민생토론회, 「역동경제 로드맵」(‘24.7.) 등 각종 대책에서 세법개정 주요 과제 기 발표
 - * 금융투자소득세 폐지, 기업의 출산장려금 비과세, 주주환원촉진세제,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

2 조세정책 여건

□ (경제 여건) 물가·성장 등 지표 개선됐으나,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

- 물가*는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는 양호한 수출**을 중심으로 회복세 시현
 - * 소비자물가(전년동기비, %): (‘24.1/4) 3.0 (4) 2.9 (5) 2.7 (6) 2.4 → (하반기e) 2% 초중반
 - **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,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플러스 지속
- 고물가·고금리 영향 누적 등으로 소상공인·서민층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 가능성

□ (구조적 여건) 인구위기·성장 둔화 등 구조적 과제 직면

- 저출생 현상,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* 등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
 - * 생산연령인구 전망(만명, 15~64세)
: (‘19) 3,763 → (‘23) 3,657 → (‘27e) 3,518 → (‘31e) 3,381 → (‘35e) 3,188
- 성장잠재력 둔화* 극복을 위한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, 생산요소 활용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 제기
 - * 잠재성장률 추정(% , OECD): (‘90년대) 7.8 (‘00년대) 4.7 (‘10년대) 3.1 (‘20년대) 2.0 (‘30년대) 1.4



□ (재정 여건)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성장-세수의 선순환 복원 필요

- 올해 국세수입은 작년 기업실적 악화*로 법인세가 부진한 상황, 경기회복 전망** 등 감안 시 하반기부터 세수여건 개선 전망

* '23년 상장사 영업이익 증감(%): (코스피) △45.0 / (코스닥) △39.8

** 경제성장률(실질, 전년동기비, %) : ('23실적) 1.4 → ('24전망) 2.6 → ('25전망) 2.2

- 복지지출 증가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,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중요

☞ 경제의 역동성 제고 및 민생안정을 중점 추진하되,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병행

참고 - '24년 세법개정 추진경과

□ 대내·외 각계 의견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

- ① (개정 건의) 국세청, 관세청, 대한상의, 중소기업중앙회, 세무사회 등 28개 단체에서 1,412건 세법개정 건의

* 현장 중심 소통을 위해 건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개정 건의 청취

– 중소기업중앙회(4.1.), 세무사회(4.3.), 중견기업연합회(4.5.), 상장사협의회(4.5.)

**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점검 및 개정 건의사항 청취

– 가족친화적 중소기업(5.23.), 전통시장(6.5.), 기업형 임대주택(6.21.) 등 총 15건

- ② (비과세·감면 평가) 일몰 도래 또는 신설 예정 조세지출에 대해 심층평가(일몰 도래)*·예비타당성평가(신설 예정)** 23건 진행

* 감면액 연 300억원 이상 의무심층평가(7건) + 주요 조세지출항목 임의심층평가(14건) : 21건

** 감면액 연 300억원 이상 특례 신규 도입시 예타 의무 : 2건

- ③ (내부 논의) 주요 쟁점에 대해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* 수시 개최

*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, 세법간 정합성을 점검하는 절차로 세제실장, 국장 및 총괄과장 등으로 구성

- ④ (대외 의견 수렴) 경제·시민단체, 전문가 그룹,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

구 분	내 용
▸ 관계기관 간담회	▸ 금융단체,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
▸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	▸ 세제분야 전문가*와 세제개편 방향 및 주요 과제 논의 * 소득·기업·재산·소비·국제조세·관세 등 6개 분야로 구성
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회위원회	▸ 중장기적 시야에서 경제·재정여건을 전망하고, 정책방향 점검 * 조세 분야 및 경제·사회·복지·환경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

II

2024년 세법개정 기본방향

- ❶

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·고용·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

❷

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·출산·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·소상공인 등 지원

❸

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

❹

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·권익 강화

정책 목표	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추진 전략	경제의 역동성 지원	민생경제 회복
	<div> <div>✓</div> <div>투자·고용·지역발전 촉진</div> </div> <div> <div>✓</div> <div>기업경쟁력 제고</div> </div> <div> <div>✓</div> <div>자본시장 활성화</div> </div>	<div> <div>✓</div> <div>결혼·출산·양육 지원</div> </div> <div> <div>✓</div> <div>서민·중산층 부담 경감</div> </div> <div> <div>✓</div> <div>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</div> </div>
	조세체계 합리화	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
	<div> <div>✓</div> <div>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</div> </div> <div> <div>✓</div> <div>비과세·감면 정비</div> </div> <div> <div>✓</div> <div>세원투명성 제고</div> </div>	<div> <div>✓</div> <div>납세자 편의 제고</div> </div> <div> <div>✓</div> <div>납세자 권익 보호</div> </div>



세법개정 상세 내용

1. 경제의 역동성 지원

투자고용 지역발전 촉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국가전략기술 등 R&D·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▸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R&D·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▸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
기업경쟁력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▸ 가업상속·승계제도 개선 ▸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
자본시장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(법인세 세액공제, 배당소득 분리과세) 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, ISA 세제지원 확대

2. 민생경제 회복

결혼·출산· 양육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결혼세액공제 신설 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
서민·중산층 부담 경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▸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
소상공인· 중소기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▸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

3. 조세체계 합리화

세부담 적정화 조세제도 효율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상속·증여세 부담 적정화 ▸ 가상자산 과세 유예 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·세율 조정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비과세·감면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
세원투명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OECD 암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

4.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

납세자 편의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
납세자 권익 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

1 경제의 역동성 지원

◇ 투자·고용·지역발전 촉진, 원활한 기업승계,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을 지원하여
민간·기업·시장 중심으로 경제의 역동성 강화

1) 투자·고용·지역발전 촉진

□ 국가전략기술 등 R&D 세액공제·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)

- ※ 「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」(‘24.6.26.)에서 발표
-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R&D 비용 세액공제,
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(~’27.12.31.)

□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(조특법)

-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* 공제율 상향(국가전략기술 4%, 일반 및 신성장·원천기술 3% → 10%)

*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



□ 중견기업 범위 조정(조특령)

-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규모 기준(매출액 상한)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(R&D비용 세액공제는 5배)로 조정

* (현행 중견기업 기준) 3,000억원 / R&D비용 세액공제 5,000억원

업종	의류 제조, 1차금속 제조 등	식료품 제조, 건설, 도소매 등	운수창고, 정보통신 등	보건사회복지, 기타개인서비스 등	숙박음식, 교육서비스 등
중소기업 매출액 기준	1,500억원	1,000억원	800억원	600억원	400억원
중견기업	4,500억원	3,000억원	2,400억원	1,800억원	1,200억원
R&D 비용	7,500억원	5,000억원	4,000억원	3,000억원	2,000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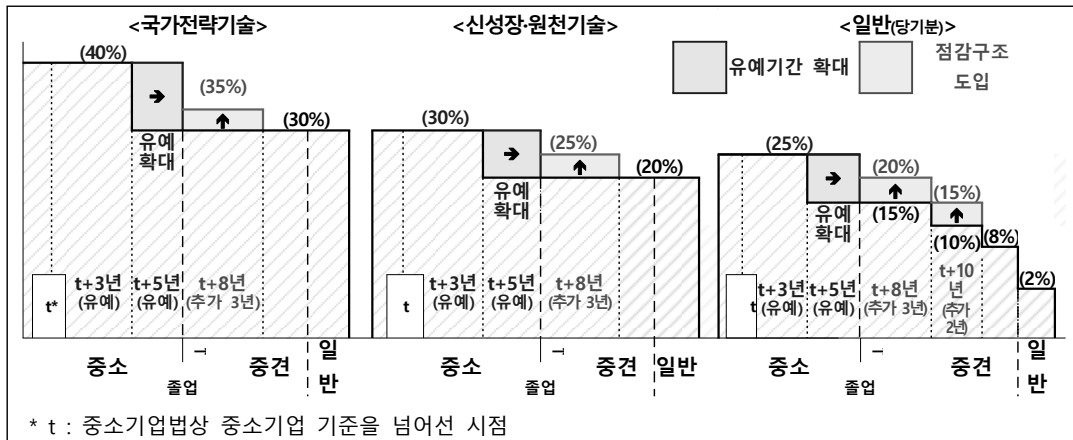
□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(법인법·조특령)

- ※ 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」(‘24.6.3.)에서 발표
-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(3 → 5년)
 - 코스피·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(총 7년)
-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* 기간 연장(3 → 5년)
 - *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,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은 중소기업 규정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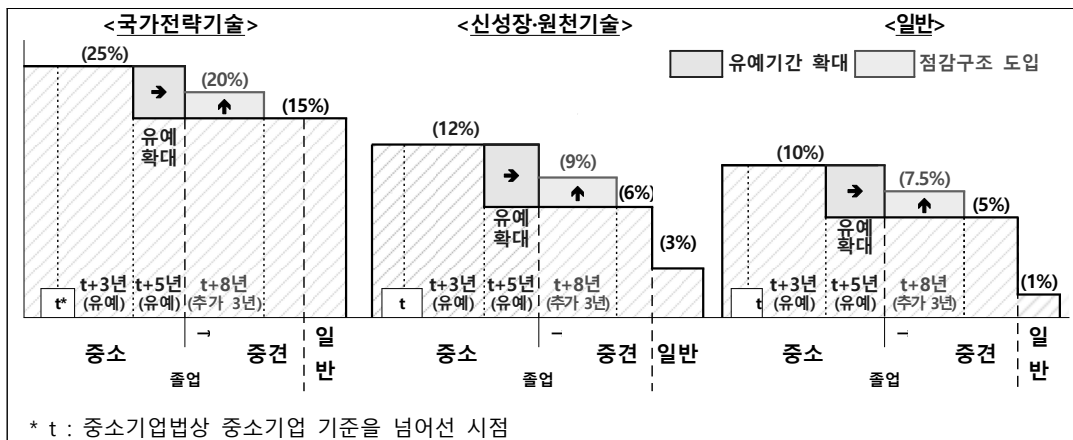
□ R&D,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(조특법)

- ※ 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」(‘24.6.3.)에서 발표
- 일반 R&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*를 국가전략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 R&D 까지 확대하고,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
 - * 중소-일반기업간 공제율 차이로 인해 기업 성장시 공제율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높은 공제율 적용

< R&D 세액공제 제도 개정안 >



<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안 >



□ R&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(조특령)

- ※ ①, ② 「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」(‘24.6.26.)에서 발표
 ③ 「사회이동성 개선방안」(‘24.5.1.)에서 발표
- ① (인건비*)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,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 적용
- * (현행) 국가전략기술 R&D 전담인력에 한해 국가전략기술 R&D 공제율 인정(일반 R&D와 동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전액 일반 R&D 공제율 적용)
- ② (기타 비용) 시설 임차료 등 비용*도 국가전략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 R&D 공제 대상에 포함**



* R&D용 시설 임차료, 소프트웨어 대여·구입비, 기술정보비, 기술지도비, 디자인 개발지도비, 특허 조사·분석비 등

** (현행) 인건비 외 시설임차료 등 비용은 일반 R&D 공제율 적용

-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R&D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대여·구입비 인정 범위 확대*

* (현행)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 → (개정안) 목적 제한 폐지

- ③ (인력개발비)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(예: 강사료, 교재비, 실습재료비 등)에 대해 공제 적용

□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(법인칙)

※ 「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」('24.6.26.)에서 발표

-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

□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(조특법)

- 고용 유인효과 및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, 제도 간소화 추진

- ①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

상시 근로자	기간제, 단시간 등 제외 근로자	→	계속고용	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통상 근로자
	기간제(1년↑), 단시간(주 15시간↑) 등			
- 제외	기간제(1년↓), 초단시간(주 15시간↓)	→	탄력고용	기간제(1개월↑), 단시간(전체) 등 계속고용 이외의 고용(일용직 제외)

- (계속고용)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여,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

- (탄력고용)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*하고, 임시직·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대상 확대

* 계속고용인원 유지·증가시 지원

< 현행 >

① 기본공제				
구 분	공제액 (단위:만원)			
	중소(3년)		중견 (3년)	대 (2년)
	수도권	지방		
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여성 등	1,450	1,550	800	400
그 외 상시근로자	850	950	450	-

② 추가공제				
구 분	공제액 (단위:만원)			
	중소		중견	
정규직 전환자(1년 지원)	1,300		900	
육아휴직복귀자(1년 지원)				

< 개정안 >

■ 고용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					
구 분		공제규모(단위:만원, %)			
		중소		중견	대
		수도권	지방		
계속 고용	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자 등	2,200	2,400	1,200	400
	그 외 계속고용	1,300	1,500	700	-
탄력 고용	임금증가율 3% ~ 20%	증가분의 20%		10%	-
	임금증가율 20% 초과	20% 초과 증가분의 40%		20%	

② 사후관리 폐지, 고용인원 계산 단순화 등 제도 간소화

- (사후관리 폐지) 고용유지 의무와 추정 규정은 폐지하되, 고용 유지시 1년 추가 공제로 대체하여 고용 유인 제공
 - * (현 행) 최초 공제연도 대비 2~3년차 고용 감소시 추정 → (개정안)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계속 고용인원 유지시 1년 추가 공제
- (고용인원 계산*) 계속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
 - * (현행) 월별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
- (최소 고용증가 기준) 고용 유인효과 제고를 위해 중견·대기업의 최소 고용증가 인원 기준 설정(중견기업 10명, 대기업 20명)

□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* 지원요건 완화(조특법·령)

- ※ 「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」(‘24.6.27.)에서 발표
 - * 해외자원개발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%를 소득·법인세에서 공제
-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외국자회사*를 통한 채굴권·조광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
 - * (현행) 내국인이 단독으로 100% 출자한 외국자회사 → (개정안)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% 출자한 자회사 포함, 해당국 정부 등의 의무 보유지분 제외

□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)

-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·법인세* 및 관세 감면** 적용기한 3년 연장(~'27.12.31.)

* 완전 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: 7년 100% + 3년 50% 감면

수도권 안으로 부분 복귀: 3년 100% + 2년 50% 감면

** 완전 복귀: 100%, 부분 복귀: 50% 감면

□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(조특법)

※ ❶ 「2024년 경제정책방향」('24.1.4.), ❷ 민생토론회('24.1.10.)에서 발표

- 1주택자가 '24.1.4.~'26.12.31. 인구감소지역* 내 1채의 주택(공시가격 4억원 이하)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** 적용

* 수도권·광역시 제외,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

** (양도소득세)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% 적용

(종합부동산세)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% 적용

- 1주택자가 '24.1.10.~'25.12.31.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(전용면적 85m², 취득가액 6억원 이하)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

2) 기업 경쟁력 제고

□ 가업상속·승계 제도 개선(상증법·령)

※ 「역동경제 로드맵」('24.7.3.)에서 발표

- ❶ 밸류업·❷ 스케일업·❸ 기회발전특구 창업·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

■ (대상 확대) 중소기업·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

→ 중소기업·중견기업 전체(상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)

■ (공제한도 상향) ❶밸류업, ❷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 2배 확대*

* 가업영위기간 10년/20년/30년 이상: 300/400/600억원 → 600/800/1,200억원

- ❸기회발전특구 창업·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

구분	세부 요건 ※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필요
① 밸류업 우수기업	① 「기업가치 제고 계획」 공시 이행 ② 5년간(’25~’29년)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(배당금+자사주 소각액)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% 이상일 것
② 스케일업 우수기업	① 5년간(’25~’29년)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&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 -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&D지출액 비중 5% + 연평균 증가율 5% -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&D지출액 비중 3% + 연평균 증가율 10% ② 5년간(’25~’29년) 고용을 유지할 것
③ 기회발전특구 창업·이전기업	○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-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-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% 이상

-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직원 임대주택, 주택자금 대여금 등 추가

□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* 폐지(상증법)

- ※ 「역동경제 로드맵」(’24.7.3.)에서 발표
 - *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해 20% 할증평가(다만,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)
-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

□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*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(조특법·령)

- *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$\Sigma(\text{개별선박의 순톤수} \times \text{톤당 1운항일 이익} \times \text{운항일수} \times \text{사용률})$ 로 계산하여 신고·납부
-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(톤세)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(~’29.12.31.)
- 국적선박 확충 유도를 위해 기준선박(국적선사가 소유한 선박 등)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(용선)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차등 적용



개별선택 손톤수	톤당 1운항일 이익(단위: 원)		
	현 행	개 정 안	
		기준선택	기준선택 외
1,000톤 이하분	14	(좌 동)	18.2
1,000~10,000톤	11		14.3
10,000~25,000톤	7		9.1
25,000톤 초과분	4		5.2

□ 수소제조용 석유가스(LPG)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(개소법)

-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특례* 신설

* LPG 부탄(275원/kg)과 LPG 프로판(14원/kg) 간 세액의 차액(261원/kg) 환급

□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*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(조특법)

- *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
-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(복수의결권) 납입대금으로 구주(1의결권, 보통주) 현물출자 시,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*시까지 과세 이연

*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, 복수의결권주식 상속·양도, 벤처기업의 상장 등

□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)

-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* 적용기한을 3년 연장(~'27.12.31.)

* (비과세) 연 2억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(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)

(분할납부)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5년간 분할납부 가능

(과세이연)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

□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* 합리화(법인법·령)

- *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는 경우 적격분할로 보아 분할이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 부여
-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

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 합리화

*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하는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개정 예정

3) 자본시장 활성화

□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(3년 한시)(조특법)

※ 「역동경제 로드맵」('24.7.3.)에서 발표

○ (법인세 세액공제)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

- (요건) ①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, ②배당·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③확대
한 코스피·코스닥 상장기업

*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「기업가치 제고 계획」 공시 이행

② 배당(결산·중간·분기배당 포함) + 자사주소각 금액

③ 직전연도 대비 증가 + 직전 3년 평균 대비 5% 증가

- (공제 대상 금액)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% 초과 증가분*

* 지배주주(특수관계자 포함)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

- (공제율) 5% (공제한도: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%)

- (적용기간) '25.1.1.~'27.12.31.(3년간) 사업연도의 주주환원

○ (배당소득 분리과세)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(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)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(결산·중간·분기배당)의 일부를 분리과세

- (대상)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(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)

- (대상 소득금액) 차년도 현금배당 ×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*

$$\begin{aligned} \text{분리과세} &= \frac{\text{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} + \text{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} \times 10\%}{\text{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}} \\ \text{소득금액 비율} & \end{aligned}$$

- (분리과세 세율) (분리과세자) 14% → 9%,

(종합과세자) 최고 45% → 25%

- (적용기간) '26.1.1.~'28.12.31. 지급받는 배당금

□ 금융투자소득세 폐지(소득법)

※ 민생토론회('24.1.17.)에서 발표

○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,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



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세제지원 확대(조특법)

※ 민생토론회('24.1.17.)에서 발표

○ 자산형성 지원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ISA의

① 납입 한도 및 ②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③ 국내 투자형 신설

① (납입 한도 확대) 연 2천만원(총 1억원) → 연 4천만원(총 2억원)

② (비과세 한도 확대) 200만원(서민형* 400만원) → 500만원(1,000만원)

* 총급여액 5천만원(종합소득금액 3,800만원) 이하 또는 농어민이 가입 대상

※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% 분리과세 적용

③ (국내 투자형 신설) 국내 상장주식, 국내 주식형 펀드(국내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)로 투자 대상을 한정

■ (납입 한도) 연 4천만원(총 2억원) / (비과세 한도) 1천만원(서민형 2천만원)

※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% 분리과세 적용

■ (가입대상)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

※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% 분리과세

			현 행	개 정 안	
				일반투자형 ISA	국내투자형 ISA(신설)
납입한도			연2천만원(총1억원)	연4천만원(총2억원)	
세 제 혜 택	일반 투자자	비과세 한도	200만원 (서민·농어민형 400만원)	500만원 (서민·농어민형 1,000만원)	1,000만원 (서민·농어민형 2,000만원)
		한도 초과분	9% 분리과세	9% 분리과세	9% 분리과세
	금융소득 종합과세자		가입제한	가입제한	가입허용 (비과세 없이 14% 분리과세 적용)

□ 조각투자상품*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(소득법)

* 미술품·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·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·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

○ 조각투자상품의 특성* 등을 고려하여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(환매·매도, 해지, 해산 포함)을 배당소득으로 과세

*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, 자산의 투자·운용·관리 등을 타인이 수행

□ 부동산투자회사*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(법인령)

- * REITs등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% 이상 배당 시,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
-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
 - * 상장리츠와 유사한 「자본시장법」 상 부동산펀드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중

□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)

-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(14%, 매입한도 2억원) 적용기한 3년 연장(~'27.12.31.까지 매입분)

□ 펀드(집합투자기구)이익 계산방법 합리화(소득령)

-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ETF·ETN(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포함)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하여 계산*
 - * (현 행) 국내 비상장주식·해외주식·외국펀드 거래·평가이익 등을 펀드이익에 포함 → (개정안) 국외 추가지수(예: 나스닥100)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·ETN,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·평가이익도 펀드이익에 포함

2 민생경제 회복

- ◇ 결혼·출산·양육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는 한편, 서민·중산층·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민생경제 회복 지원

1) 결혼·출산·양육 지원

□ 결혼세액공제 신설(조특법)

- ※ 「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」('24.6.19.)에서 발표
-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(부부 1인당 50만원) 적용
 - * '24.1.1.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('24년~'26년) 적용, 생애 1회 한정



□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(조특법)

- ※ 「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‘24.7.3.)에서 발표
-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* 및 이자소득 비과세**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
 - *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(300만원 한도) 40% 소득공제
 - ** 총급여액 3,600만원(종합소득 2,600만원)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소득(500만원 한도) 비과세

□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(소득령·종부령)

- ※ 「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」(‘24.6.19.)에서 발표
-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* 간주기간 확대(5년→10년)
 - * (양도소득세)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
(종합부동산세)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·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% 적용

□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(소득법)

- ※ 민생토론회(‘24.3.5.)에서 발표
- 기업이 근로자(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)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*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(기업의 비용 인정)
 - *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(2회 이내)한 경우(‘24년은 ’21.1.1.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)

□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(소득법)

- ※ 「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」(‘24.6.19.)에서 발표
-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·손자녀(8~20세)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
 - * 공제금액(첫째 / 둘째 / 셋째, 만원) : (현행) 15 / 20 / 30 → (개정안) 25 / 30 / 40

2) 서민·중산층 부담 경감

□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(조특법)

※ 민생토론회('24.3.5.)에서 발표

- 서민·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('25.7.1. 이후 지출분)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* 적용 확대

*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거주자, 공제율 30%, 추가공제한도(300만원)에 포함

□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(조특법)

※ 「2024년 경제정책방향」('24.1.4.)에서 발표

-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상향(연 500→2,000만원)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 확대

* (현행) ~10만원: 100/110, 10~500만원: 15% → (개정안) ~10만원: 100/110, 10~2,000만원: 15%

□ 근로장려금(EITC)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(조특법)

※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('24.4.4.)에서 발표

-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(연 3,800만원)을 연 4,400만원*으로 확대

*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(연 2,200만원)의 두 배

□ 청년도약계좌 비과세* 추징요건 완화(조특법)

※ 민생토론회('24.3.5.)에서 발표

* (대상) 총급여 7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,300만원 이하인 청년(만19~34세)
(세제지원)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(납입한도 연 840만원)

-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(현행 5년)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

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*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(조특법)

* (기업)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성과급의 15% 세액공제

(근로자)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50% 감면

- 법인세 공제·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(~'27.12.31.)하되, 기업·근로자 모두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 공제율 인하(15→10%)

**□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*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(조특법)**

- * 성과보상기금에 5년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 50%(청년 90%), 중견기업 30%(청년 50%) 감면
-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(~'27.12.31.)하고, 가입기간 요건을 완화(5년 이상 → 3년 이상)

□ 채용시 세제지원*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(조특법·령)

- ※ 「사회이동성 개선방안」('24.5.1.)에서 발표
- * (기업) 통합고용 공제액(중소/중견/대, 만원): (기본)850~950/450/0 (우대)1,450~1,550/800/400 (근로자)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: 60세 이상,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3년간 70% 감면
- 경력단절자 요건을 남성까지 확대하고, 동일업종 취업 요건 폐지

□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(조특법)

- 친환경자동차(하이브리드·전기·수소차)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(~'26.12.31.)
- 친환경차 보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조정(100→70만원)하고, 전기(300만원)·수소차(400만원)는 현행 유지

□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* 적용기한 연장(소득령)

- * 임대료 증가율 5%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
- 임대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(~'26.12.31.)

□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*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·법인령)

- * (법인)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(10%) 적용에서 제외 (거주자) 양도소득세 10% 감면
-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~'27.12.31.)

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(중부령)

- 공공주택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*에 대해 중부세 합산배제

*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하고, 주택은 분양받는 자가 소유하는 주택

3)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

□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* 강화(조특법)

※ 「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 대책」(’24.7.3.)에서 발표

* 공제 납입액(분기별 300만원)은 사업소득(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)에서 공제

- 소기업·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*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**

* (사업/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) 500→600만원, (4천만원~1억원 이하) 300→400만원

** 총급여 7천만원→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

□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*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)

※ 「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 대책」(’24.7.3.)에서 발표

*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%(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%)를 소득·법인세에서 공제

-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(∼’25.12.31.)

□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(조특법)

- 건설기계 처분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 분할 과세 특례 신설

* (현 행) 건설기계(‘18년 이후 취득) 처분이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

(개정안)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처분이익(1,000만원 초과분 대상) 3년 분할 과세



□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(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)

-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 등을 추가

□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*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)

- *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(매출 15억원 미만)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①납부 지연가산세 면제, ②분납(최대 5년) 허용
-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'23.7.25.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'24.7.25. 기준으로 확대하고, 신청기간 1년 연장(∼'28.12.31.)

□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(주세법·령)

-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대상 제조자 및 경감한도 확대

	현 행	개정안
경감대상 제조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500㎥, 증류주 250㎥ 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700㎥, 증류주 350㎥ 이하
경감한도 및 경감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발효주) 200㎥ 이하 : 50% (증류주) 100㎥ 이하 : 5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발효주) 200㎥ 이하 : 50% 200~400㎥ : 30% (증류주) 100㎥ 이하 : 50% 100~200㎥ : 30%

□ 주류 관련 제도 개선(주세령·주류면허령)

-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탁주 제조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·색소 추가*
 - * 현재는 향료·색소첨가 시 기타주류로 분류, 개정시 세율이 낮은 탁주로 분류
- 영세 주류제조자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시 인정되는 실감량* 한도 확대(연 2%→4%)
 - * 주류 생산과정(여과·저장·용기주입 등)에서 발생하는 손실분
- 주류산업 진입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득시 요구되는 창고면적 완화(66㎡→22㎡)

3 조세체계 합리화

◇ 세부담 적정화 등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,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·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여 합리적인 조세정책 체계 구축

1)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

□ 상속·증여세 부담 적정화(상증법)

- 물가·자산*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,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·증여세율 및 과표·공제 금액 조정

* (물가) '97년 대비 2.0배 상승, (주택가격) '97년 대비 전국 2.2배, 수도권 2.8배 상승

- (상속·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) 최고세율을 40%로 하향 조정하고, 하위 과표 구간 확대(10% 세율 적용구간: 1억원 이하 → 2억원 이하)

현행		개정안	
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
1억원 이하	10%	2억원 이하	10%
5억원 이하	20%	5억원 이하	20%
10억원 이하	30%	10억원 이하	30%
30억원 이하	40%	10억원 초과	40%
30억원 초과	50%		

- (상속세 자녀공제 금액) 1인당 5천만원 → 5억원

□ 가상자산 과세* 유예(소득법)

* 가상자산 양도·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(세율 20%)

-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(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」, '24.7.19.~)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('25년→'27년)

□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(소득법·령)

-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(최대 50%)을 취득가액으로 의제*하는 방법 허용

* 단,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,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 불인정



□ 공시대상기업집단*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(법인법)

- 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
-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(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)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
 - * (현 행)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
 - (개정안)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

□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·세율 조정(법인법)

-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*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
(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, 9%)을 19%로 조정
- * (요건: ①+②+③)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% 초과,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·이자·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% 이상, ③ 상시근로자 5인 미만

□ 종업원 할인금액*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(소득법)

- * 자동차·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
-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·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을 시가의 20%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

□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* 사후관리 합리화(조특법)

- * 교육비의 15%, 의료비의 15%(미숙아 20%, 난임시술비 30%), 월세액의 15~17% 세액공제 등
- 성실사업자·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·교육비·월세 세액공제의 추징요건인 과소신고 범위 조정*
- * (현 행) 수입금액 20%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% 이상 과대계상
(개정안) 사업소득금액 성실사업자20%/성실신고확인대상자10% 이상 과소신고

□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* 기준 합리화(국조령)

- *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과다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
-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는 달리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
 - * 손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: (현행) 금융·일반지주회사 → (개정안) 금융지주회사

□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(교통세법)

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특별회계·기금*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3년 연장(~'27.12.31.)
 - * 교통시설특별회계(68%), 환경개선특별회계(23%), 균형발전특별회계(2%), 기후대응기금(7%)에 배분

2) 비과세·감면 정비

□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* 공제율 조정(부가법)

- *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(소비자상대업종)가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.3%(’27년 이후 1%)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
-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하향 조정(1.3→0.65%, ’27년 이후 1.0→0.5%)

□ 전자신고세액공제* 축소(조특법)

- * (세액공제액) 종합소득세, 양도소득세, 법인세 건당 2만원 /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(공제 한도) 세무대리인 300만원, 세무법인 750만원
- 전자신고가 정착*된 종합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(양도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 유지)
 - * 전자신고율(’22년): 종합소득세 (99.5%), 부가가치세 (97.1%), 법인세 (99.6%)
- 세무대리인·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 한도 축소
 - (세무대리인) 300만원 → 200만원 / ■ (세무법인) 750만원 → 500만원

□ 납세조합 세액공제*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(소득법·령)

- * 세원포착이 어려운 납세자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납부하는 경우 ① 소득세액의 5%를 공제 (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 한도), ② 조합에 교부금 지급(납부세액의 2~10%)
- (근로자)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(~'27.12.31.)하되, 세액공제율 및 조합 교부금 조정*
 - * (공제율) 소득세액의 5% → 3% (교부금) 납부세액의 2~10% → 1~10%
- (사업자)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및 교부금 폐지



□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(조특법)

-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(~'27.12.31.)하고, 고용증가시 적용하는 감면율 인상(고용증가율의 50% → 100%)
 - 다만,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 설정(연간 5억원)
- 지방에 비해 창업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
 - * (현행) 일반 50%, 청년·생계형 100% → (개정안) 일반 25%, 청년·생계형 75%
-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* 우대 감면율(초기 3년 +25%p) 적용 기한 종료
 - * S/W(정보서비스 등), 콘텐츠(영상제작 등), 관광, 물류, 사업서비스, 교육

□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(조특법·령)

-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*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방이전 감면 적용
 - *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현재와 동일하게 감면

□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(조특령)

- 법인,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*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·중견기업에서 제외
 - *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·고용 등 「조특법」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,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 대상
-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'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*'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
 - * (요건: ❶+❷+❸) ❶ 지배주주등 지분율 50% 초과, ❷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·이자·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% 이상, 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

□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(조특법)

-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

□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(국기령)

-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,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 인하
 - (건당 한도) 50만원 → 25만원 / (인당 연간 한도) 200만원 → 100만원

□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(조특법)

- '24년 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(총 29건) 중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, 활용 실적이 저조한 제도를 적용 종료(총 7건)

< '24년 적용 종료 조세특례 >

- ▶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
- ▶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
- ▶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
- ▶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
- ▶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(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)
- ▶ 통합고용세액공제(정규직 전환 추가 공제)
- ▶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(신성장서비스업 감면율 우대)

3) 세원투명성 제고

□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(조특법)

-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*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
 - *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

□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* 적용기한 연장(부가법·소득법)

- * 전자세금계산서(전자계산서)를 발급·전송한 매출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발급 건당 200원을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(소득세) 납부세액에서 공제
-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발급·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(~'27.12.31.)



□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(관세법)

- 성실납부 관행 정착 등을 위해 일정 요건*에 해당하는 수입업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하는 제도 신설

* 직전 2개년도 평균 수입금액 3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자가 선택에 따라 적용

□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와 근거 신설(부가법)

- 거짓세금계산서 발급·수취 등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와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* 현재 소득·법인세, 상속·증여세, 개별소비세,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목은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부와 가능

□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(부가법)

-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에 대한 가산세 인상(공급가액의 1→2%)

□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(소득법)

-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율 20%* 일괄 적용(원천징수세액은 신고·납부시 정산 가능)

* (현행) 계약기간 3년 이하 20%, 3년 초과 3% → (개정안) 계약기간 상관없이 20%

□ 양도소득세 이월과세* 적용대상 자산 확대(소득법)

- * 토지·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·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
-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*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

* (현행) 토지·건물, 부동산 취득 권리(아파트 당첨권 등), 시설물 이용권(회원권 등)

□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(소득법)

- 거주자 범위*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

* (현행) 1과세기간(1.1.~12.31.)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 →

(개정안)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도 합산하여 거주자 판정

□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(소득법·령, 법인법·령, 관세법·령)

-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
- 관세청장에게 제출*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거래내역(채납자 한정) 추가
*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·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과세자료(현 69개 자료)

□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(국조법)

- OECD 다자간 암호화자산* 자동정보교환체계**(‘27년 교환 예정)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
*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 가상자산 + 토큰형 증권
**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비거주자·외국법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, 관련 가입국 간 해당 정보를 매년 교환

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* 확대(소득령)

- * 현재 변호사, 병·의원, 교습학원, 가구소매업 등 138개 업종 지정
- 소득과약 기반 확충을 위해 4개 업종*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
* ①기념품,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, ②사진 처리업, ③낚시장 운영업, ④기타 수상 오락 서비스업

□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부과(교통세법)

-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부과

□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(국기법)

- 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,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*
* (현 행)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 →
(개정안) ①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, ②국세 등을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



□ 제2차 납세의무*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(국기법)

- * 법인의 재산으로는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액을 동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(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50%)가 부담할 의무
-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*에 영농·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
- * (현행) 주주,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,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

□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(관세법)

- 관세탈루 방지 등을 위해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*(7년) 신설
- *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

□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(관세법, FTA관세법)

- 관세법령상 부정행위*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(40% → 60%)
- * (관세법)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·문서 작성·수취, 자료 파기, 거래 조작·은폐 등 (FTA관세법) 원산지증명서 거짓 작성, 위·변조, 파기 등

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

◇ 납세 편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여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

1) 납세자 편의 제고

□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(소득법·법인법)

-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이상(예: 연 3억원)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등 편의 제고

□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(관세법·령)

-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('26년 시행)
 - (전자상거래업체 등록) 선별검사 등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

전자상거래업체*는 관세청에 등록 선택 가능

* 국내외 통신판매업자, 통신판매중개업자, 배송대행업자

- (거래정보 제공) 관세청장의 요청을 받은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*를 물품 수입전까지 제공

* 주문번호, 구매일자, 물품명, 물품가격, 플랫폼, 수신인 등

- (통관효율화)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수출입신고 및 선별 검사* 등 적용

* (현 행) 모든 전자상거래물품(택송품) X-ray 검사 →
(개정안) 고위험물품 집중 검사 등 선별검사 가능

□ 국외투자기구의 국채등 비과세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(소득법·령, 법인법·령)

- 국채등에 투자한 국외투자기구에게 이자소득등을 지급할 때,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에 국외사모펀드 추가*

* 원천징수 의무면제 대상: (현행) 국외공모펀드 → (개정안) 국외공모·사모펀드

□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(국기법)

- 국세환급금을 1년간 미수령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기준 상향(10만원 → 20만원)

□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(FTA관세법령)

-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* 신청을 허용하고 사전심사 대상에 실행 관세율을 추가

* FTA 특혜관세 요건 충족 여부를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신청하여 회신받는 제도

□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(FTA관세법)

- 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으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입자가 부족 세액을 수정신고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* 허용

* (현행) 수입신고 수리 후 1년내 가능 +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며 납부고지 시 가능



2) 납세자 권익 보호

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(국조법·령)

-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*

- * ① 소송·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계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
- ②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서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·내국법인

-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*

- * <과소·미신고>(현행) 위반금액의 10~20%, 20억원 상한 → (개정안) 위반금액의 10%, 10억원 상한
- <거짓·미소명>(현행) 위반금액의 20% → (개정안) 위반금액의 10%

□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(국기법)

-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*

- * (현행) 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허용

□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(국기법)

- 세액공제액 이월공제(적용기한 10년)시 해당 공제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*

- * 현재 결손금 이월공제(적용기한 15년)시 해당 결손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적용중

□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(국기법)

-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확대(조사 15일 전 → 20일 전)
-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 축소(조사 15일 전 → 7일 전)

□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(국징령)

-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의 적용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당한 자를 추가

- * (현행)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

▶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◀
(기업 관련 내용 일부 발췌)

I 경제의 역동성 지원

1 투자·고용·지역발전 촉진

(1) 중견기업 범위 조정

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- ☐ (개정 취지) 중견기업 업종 간 과세형평 제고
- ☐ (개정 내용) 중견기업 규모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(R&D 세액공제 적용시 5배)로 조정
 - (적용시점) 조특령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

(2)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

- ☐ (졸업유예 기간 확대)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
- ☐ (상장기업 우대)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출을 유도하고,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기업의 성장 가속화 및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·코스닥 상장기업은 추가 2년 유예(3 → 7년)

(3) R&D,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

- ☐ (개정 내용) 매출액 또는 자산 증가로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(유예기간 종료)한 경우 3년(일반 R&D의 경우 5년)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중간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



(4) R&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(인건비)

- (개정 내용) R&D 세액공제 적용 시, 전체 연구 시간 중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시간에 따라 각각의 공제율 적용

* (예) 연간 실제 투입시간 비율이 국가전략기술 90%, 일반 10%인 연구원:

(현 행) 인건비의 100% 일반 공제율 적용 →

(개정안) 인건비의 90%는 국가전략기술 공제율, 인건비의 10%는 일반 공제율 적용

** 내국인이 실제 연구 투입시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R&D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원의 실제 투입 시간 입증 자료를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 필요

(5)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

- ① 세액공제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여 고용유인 기능 강화
- (현황) 계산의 복잡성·가산세 부담 등으로 고용유인 효과 제한
 - 기업의 채용시점에 공제여부가 불투명하여 세금 신고시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, 경정청구를 거치게 됨에 따라 고용유인 기능 부족
 -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전액 추정되고, 계산이 틀릴 경우 가산세 등으로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
 - (기대효과) 기업이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공제여부와 공제액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고용창출 유인기능 강화
- ② 기업의 탄력고용 인건비 증가에 대한 직접지원*으로 임금격차 완화
- * 계속고용인원 유지·증가시 지원
- (현황)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고, 근로여건 개선 지원 부족
 -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열악한 임시직·초단시간 근로자 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
 -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으나, 전환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근로자*의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은 부족
 - * 정년퇴직자, 자발적 비정규직, 단순노무직 등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고 부적합
 - (기대효과) 탄력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출 증가를 직접 지원하여 임금격차 완화 등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

(6)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

- ☐ (개정 취지)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광물 등 해외자원 확보 역량 확충 지원 필요
- ☐ (개정 내용)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범위 완화
 - ❶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% 출자한 외국자회사도 포함
 - ❷ 내국인 100% 출자 여부를 판단할 때,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은 제외

2 기업경쟁력 제고

(1) 가업상속·승계 제도 개선

- ☐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
 - 중소·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 성장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

(2)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

- ☐ 기업의 승계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·고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 -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부동산 등 일반 재산 상속이 아니라 기업승계와 관련된 것으로, 기업의 지속적 성장·고용 유지 등을 감안한 것임
- ☐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·증여시점에서 측정하기 어렵고, 개별 거래의 특성 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0% 할증평가하는 문제가 있음
 - * 해외에서 할증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, 독일 등 소수에 불과함

(3)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

- ☐ (개정 취지) 최근 도입('23.11월)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성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
- ☐ (개정 내용) 벤처기업 창업주*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을 납입하는



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시**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

* 벤처기업의 발기인 & 상무 이사 & 30%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
(「벤처기업법」 §16의11)

**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, 복수의결권주식 상속·양도,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,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(「벤처기업법」 §16의12)

○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납부방식, 과세이연 신청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
(4)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

□ (개정 내용)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인정

□ (개정 취지)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배정을 제한하는 「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*」을 반영하여 적격분할 요건을 합리화

* 현재 개정 추진 중(입법예고 기간: '24.6.4.~7.16.)

3 자본시장 활성화

(1)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

① 개정 내용(법인세 세액공제)

□ (대상) ①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, ②배당·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③확대한 코스파·코스닥 상장기업

*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「기업가치 제고 계획」 공시 이행

② 배당(결산·중간·분기배당 포함) + 자사주소각 금액

③ 직전연도 대비 증가 + 직전 3년 평균 대비 5% 증가

□ (과세특례) 주주환원 확대 금액에 비례하여 법인세 세액공제

○ (공제 대상 금액)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% 초과 증가분*

* 지배주주(특수관계자 포함)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

○ (공제율) 5% (공제한도: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%)

□ (적용기간) '25.1.1~'27.12.31.(3년간) 사업연도의 주주환원

② 개정 내용(배당소득 분리과세)

- (대상)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*의 개인주주(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)
- *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(❶「기업가치 제고 계획」 공시를 이행한 상장법인으로서, ❷ 주주환원금액 직전연도 대비 증가 & 직전 3년 평균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)
- (과세특례)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(결산·중간·분기배당)의 일부를 분리과세
- (대상 소득금액) 차년도 현금배당 ×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*
- *
$$\frac{\text{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}}{\text{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}} = \frac{\text{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} + \text{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} \times 10\%}{\text{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}}$$
- (과세방식) 현금배당 금액 중 대상소득금액의 일부를 9% 원천징수, 종합과세 대상은 25% 분리과세 선택 허용
- 종합과세자는 ❶25% 분리과세 또는 ❷종합과세(2천만원 한도 9%) 중 선택
- * ❶ 배당 증가금액 등 × 25% + 그 외 배당 × 비교 종합과세
- ❷ 배당 증가금액 등(2천만원 한도) × 9% + 그 외 배당 × 비교 종합과세
- (적용기간) '26.1.1.~'28.12.31.까지 지급받는 배당금

③ 주주환원 촉진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차이점

- (적용대상 · 요건) 적용 대상을 주주(주식시장의 수요자)에서 기업(공급자)까지 확대하고, 요건을 단순화하여 정책 체감효과 증대
- 또한, 결산배당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달리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도 포함하여 정책 실효성 확대

		'14년 배당소득증대세제	'24년 주주환원 촉진세제(안)
도입 취지		▶ 기업이익의 가계소득 환류를 통한 내수 활성화	▶ 주주환원 촉진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 * 주주환원: 배당 및 자산주소각
지원 내용	법인세	▶ 없음	▶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% 세액공제
	배당 소득세	▶ (분리과세) 14 → 9% ▶ (종합과세) '15년25% 분리과세 '16-'17년5% 세액공제	▶ (분리과세) 14 → 9% ▶ (종합과세) 25% 분리과세



핵심 요건	▶ 배당증가율, 배당성향, 배당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고배당 기업(요건이 복잡하고 엄격)	▶ 「기업가치 제고 계획」 공시 + 직전 3년 대비 주주환원금액을 5% 초과하여 증가시킨 기업 (요건 단순화)
적용 범위	▶ 현금배당*(전체) * 결산배당(중간배당 제외)	▶ (법인세) 배당*+자사주소각 * 결산배당(중간배당 포함) ▶ (배당소득세) 현금배당*(일부) * 결산배당(중간배당 포함)

*: 배당소득증대세제 대비 지원 확대사항

(2)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세제지원 확대

① 개정 취지

- ☐ 국민의 자산 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납입·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
 -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를 주식·펀드 등 금융자산 투자로 유도
- ☐ ISA 도입('16.3월) 이후 현재까지 납입한도(年 2천만원, 총 1억원) 및 비과세 한도(일반형 200만원*)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점도 감안
 - * 서민형의 경우 '18년부터 250 → 400만원으로 비과세한도 상향

② 국내투자형 ISA에서 국내주식형 펀드의 개념

- ☐ 국내 상장주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
 - 국내 상장주식 의무 투자 비율은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

③ 국내투자형 ISA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을 허용하는 이유

- ☐ 금융자산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
 -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포함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·부동산 투자수요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도

- ☐ 한편,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납입한도(2억원) 내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(9%) 적용 없이 14%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

Ⅱ **민생경제 회복**

1 **결혼·출산·양육 지원**

(1)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

① 개정 취지

- ☐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극복 노력 뒷받침
- 아울러,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일시에 근로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 해소

② 현재 출산·양육수당과 구분

- ☐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생일 이후 2년 내에는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,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
- 현재 양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하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(현행 유지)
 - 출산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별개로 출산과 관련하여 일시(최대 2회 분할 지급)에 지급받는 급여

③ 적용 특례

- ☐ ('25.1.1.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)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
- ☐ ('24.1.1.~'24.12.31. 지급한 출산지원금) 개정 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일이 '21.1.1. 이후인 경우 비과세 적용



④ 특수관계자에 대해 비과세 제한 이유

- ☐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

2 서민·중산층 부담 경감

(1)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

- ☐ (경력단절남성 지원) 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은 남녀 공통의 문제로 맞벌이 보편화 등 사회변화에 맞춰 남성도 지원
- ☐ (업종제한 폐지) 경력단절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일업종(표준산업중분류) 재취업 요건 폐지
- ☐ (퇴직사유 추가) 장애자녀 양육시 연령제한(8세)을 적용하지 않고, 7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직도 인정

(2)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

하이브리드차의 감면한도를 축소할 이유는?

- ☐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추이, 심층평가 결과* 등을 감안한 것임
- * '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(KDI) :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차와의 경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의 단계적 축소방안을 고려할 필요

3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

(1)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

- ☐ 건설기계 개인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급증 완화 및 노후화된 기계 대체를 통한 산업안전 강화

- 고가의 건설장비를 1대만 보유·대여하는 사업자의 경우, 장부가액이 낮은 건설기계 처분시 일시적으로 세부담 급증*

* 신규 건설기계 구입을 위해서는 기존 노후된 건설기계의 처분이 필요하나 세부담으로 인해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

III 조세체계 합리화

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

(1-1)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

- ☐ 물가·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,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·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
- ☐ 우리나라 상속·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은 물가·자산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유지되어 옴
- ☐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(26%) 및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속세율 하향 조정

(1-2)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

- ☐ 중산층 세부담 경감, 물가·자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(5천만원 → 5억원)

(2)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

① 개정 취지

- ☐ 주요 기업 등은 자사 및 계열사 직원에 대하여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제품 구입 시 할인가격 적용
 - 종업원 할인혜택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이 없어 과세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



② 시가의 판단기준

- ☐ 세법상 시가 판단기준에 따라 실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
 - 통상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,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가능

(3)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

- ☐ (개정 취지)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취지를 고려
 - ‘금융 및 보험업’의 경우 업종 특성상 차입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, 과다지급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손금산입 허용
 -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‘금융·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’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

2 비과세·감면 정비

(1)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

- ☐ (개정 내용) 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제율을 50% 하향 조정(1.3→0.65%, '27년 이후 1.0→0.5%)
- ☐ (개정 취지) '94년 제도 도입 이후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 등 감안 시 제도 효과성이 낮음*
 - * '22년 심층평가 결과(KDI) : 제도 도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므로 제도 축소 필요
 - 현재는 공급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제대상자에게 동일한 공제율 적용 중 → 상위 사업자에 한하여 공제율 축소

(2)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

① 개정 취지

- ☐ ❶전자신고 정착, 관련 ❷인프라 확충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

❶ 종합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 전자신고율이 97% 상회*

* 전자신고율('03→'22년, %): (종합소득세)43.5→99.5 (법인세)92.7→99.6 (부가가치세)33.8→97.1

❷ 전자신고 인프라*가 크게 확충되어, 지금은 세액공제 도입 시에 비해 전자신고가 간편

* 홈택스(인터넷), 손택스(스마트폰), 국세청이 보유자료를 활용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서비스(모두채움서비스, 세금비서) 등

□ 해외 주요국(영국, 일본 등)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한시적으로만 운영(1~6년) 하였으며, 제도가 정착된 뒤에는 폐지

②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전부 폐지되는지?

□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비율은 여전히 50%대('23년 52.3%)에 머무르고 있어, 당분간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유지할 계획

(3)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

□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(~'27.12.31.)하고, 고용 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을 인상(고용증가율의 50% → 100%)

○ 다만, 특정 기업에 감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도설정(연간 5억원)

□ 지방보다 창업 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을 인하(단, 인구감소지역은 현행 유지)

* (현행) 일반 50%, 청년·생계형 100% → (개정안) 일반 25%, 청년·생계형 75%

○ '26.1.1.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하여 1년간 감면을 유예

□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* 우대 감면을(초기 3년 +25%p) 적용기한 종료

* S/W(정보서비스 등), 콘텐츠(영상제작 등), 관광, 물류, 사업서비스, 교육

(4)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

□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



- 다만 여전히 정주여건 등이 여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불리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*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

*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, 현재 수도권 중에서는 강화, 옹진, 연천, 가평이 이에 해당

< 개정안 주요내용 >

이전 前	이전 後	허용여부
수도권 과밀억제 권역	수도권 안 (과밀억제권역 밖)	(현행) 허용 → (개정안)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 ※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허용
	수도권 밖	허용

③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인지?

- ‘지방’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변함없음
-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공장을 ‘수도권 밖’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감면 적용
 - 감면요건 개정* 목적은,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전지원세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
- * ① 이전 전 10년 내에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을 받은 기업은 제외,
② 이전 후 영위 업종이 이전 전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

- 수도권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,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
- 최근 과밀억제권역 위주로 수도권의 인구가 증가*하는 상황
- * 최근 5년간('19년~'23년) 권역별 인구증감(천명):
(과밀억제) △449 (△2%) (성장관리) +606 (+11%) (자연보전) +59 (+5%)

④ 내년에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는 것인지?

- 개정규정은 '25.1.1. 이후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
- 다만, '24.12.31.까지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경우*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예정
- * ①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조특법 §63①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
② 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(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)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

③ 공장 이전을 위해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등

(6)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

- 법인, 개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
 - (부동산 임대업 배제) 현재 개인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
 - (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) 조특법상 개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·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

(7)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

- (개정 내용) 신고포상금의 건당·연간 지급액 한도를 인하
 - 건당 50만원 → 25만원, 인당 연간 200만원 → 100만원
- (개정 취지)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으로 정책효과는 감소함에 비해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로 인한 피해는 과도한 측면

3 세원투명성 제고

(1)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

-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신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
 - 수입신고 후 다음달 말일까지 월단위로 세액 납부 허용
(납부기한 최대 45일 연장)

구 분	주 요 내 용
신고대상	▪ 직전 2개년 평균 연간 수입액 3천만불 미만 업체 중 신청한 자 *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(AEO), 소규모성실사업자 제외
신고물품	▪ 수입(납세)신고한 물품 *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(ACVA) 물품,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물품 제외
신고내용	▪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확정신고 * 관세사등이 과세가격·품목분류 적정성, 납세신고 정확도 등 확인·작성



신고·납부기한	▪ 수입(납세)신고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
시행시기	▪ '28.1.1.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

③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하는 이유

- ☐ 관세사를 통한 성실신고 확인 여부에 대해 기업의 선택권 부여
 - 성실신고 부담(수수료 등)과 납부이연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을 비교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

④ '28.1.1.부터 시행하는 이유

- ☐ 전산시스템 구축*, 고시·지침 등 하위법령 제개정, 수입업체·관세사 안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'28년 시행
 - * ('25~'27) 정보화 예산 반영 및 시스템 개발 → ('28) 시행

(3)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

- ☐ (개정 내용) 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에 영농·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(과점조합원) 추가*
 - * 과점주주와 동일한 요건 적용
- ☐ (개정 취지) 영농·영어조합법인이 법인세,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조합원의 과세회피를 방지할 필요

IV

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

1 납세자 편의 제고

(1)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

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은?

-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
 - 다만,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별 ‘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모,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

(2)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

- (개정 내용) 환급금 자동 충당의 요건 중 금액요건을 상향
 - 충당 후 잔액 10만원 이하 → 20만원 이하
- (개정 취지) 납세자가 환급금 수령을 적기에 하지 않아 미수령 환급금이 소멸시효(5년) 만료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방지
 - *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한 후 잔액이 20만원인 경우 개정 효과
(현 행) 5년간 미수령시 소멸시효 만료로 전액 국고에 귀속
(개정안) 1년간 미수령한 경우 환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자동으로 충당 가능

2 납세자 권익 보호

(1)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

- (개정 내용)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* 및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수준 완화**
 - * ①소송·상호합의 등 결과로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
②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서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·내국법인
 - ** <과소·미신고>(현행) 위반금액 10~20%, 20억원 限 → (개정안) 위반금액 10%, 10억원 限
<거짓·미소명>(현행) 위반금액 20% → (개정안) 위반금액 10%
- (개정 취지)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부담 완화
 - (비거주자) 소송·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자(비거주자)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필요
 - (해외신탁명세서 제출자) 해외신탁명세서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중 정보제공은 불필요
 - (과태료) 현행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따른 국조법상 다른 과태료 수준에 비해 과



도하게 높아*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인하 추진

* 높은 과태료 금액 외에도, 다른 과태료와 달리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누진율 적용

(2)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

- ☐ (개정 내용)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내 소재하지 않더라도, 해당 지역에서 재난 등으로 부상당한 자도 특례 대상에 추가
- ☐ (개정 취지)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을 당한 타 지역 사업자도 동일하게 정상적인 사업영위가 어려우나 현행법상 특례 적용 불가
 - 대형 재난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특례를 적용하여 사업 정상화 지원

V 기 타

(1)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

- ☐ (개정 내용) 사업연도 종료일에 따라 '26.6.30일 전에 신고의무가 도래하더라도' 26.6.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
 - ☐ (개정 취지) 신고기한은 최초적용연도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, 그 후 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로 규정
 - 사업연도가 12개월인 경우 신고기한은 '26.6.30일이나, 사업 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'26.6.30일 전에 신고의무 도래 가능
- ⇒ 기업의 이행부담을 감안하여 '26.6.30일 전에 신고의무가 도래하지 않도록 특례 마련